

# 2026년 주요업무계획



2026. 1.

**해양경찰청**



# 목 차

I . '25년 주요 성과 및 반성	1
II . 정책추진 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	7
1. 여건 분석	8
3. 업무 추진방향	9
III . '26년 주요업무 계획	11
1. 정책 추진 체계	12
2. 주요 정책	21



---

# I. '25년 주요 성과 및 반성

---

## □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 및 미래형 경비체계 구축



- (불법조업 대응) 중국어선 성어기 등 시기별 특별단속과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한 단속·차단 작전으로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 중
- (전략순찰 강화) 경계미확정해역 관리 강화를 위해 서해 구조물 순찰을 정규화('25.4.)하고, 중국어선 휴어기에는 대형함 경비 확대 조치('25.8.)
- (광역 감시·정보체계 기반) 「해양경비법」을 개정\*('25.10.)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, 위성센터 착공('25.11.) 및 직제를 반영(+1센터, +10명)

\* 해양경비정보 정의·수집·활용, 시스템 구축·운영, 관계기관 정보 제공 등

- (해양 대테러 활동) APEC 정상회의 해상경호\*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대테러 순찰과 신유형 테러대비 훈련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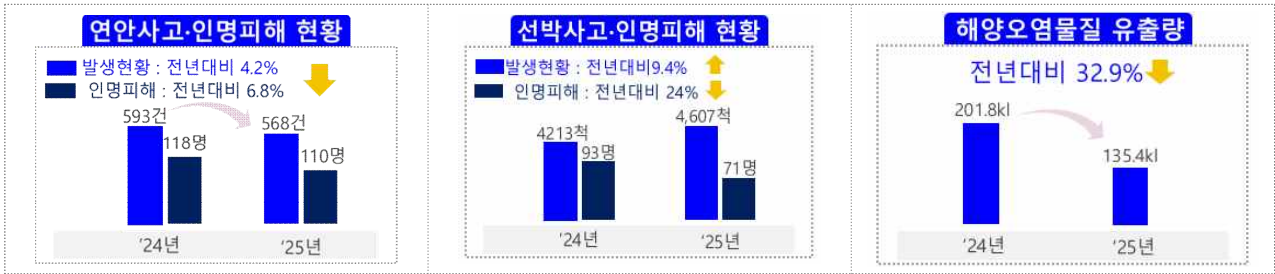
\* APEC 정상회의 해상경호 : 10.16.~11.2.(18일간)

- (AI 항공분석) 전국 항공대에 「항공 정보 분석반(AIU)」을 신설하고 '어선 식별 AI\*'를 임무 현장에 적용

\* AI가 해당 어선의 국적, 선종, 조업 여부, 조업한계선 진입 여부를 분석

(보완점) ① 서해 구조물 등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해 해양경찰력 보강과 작전능력 강화 필요 ② 해양 감시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무인기 등 장비 도입이 요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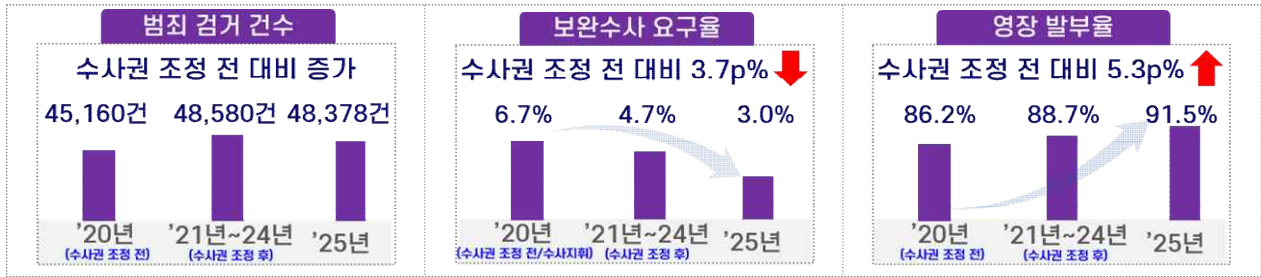
## □ 선제적 해양안전관리와 구조대응 역량 제고



- (시기별 안전관리) 해양안전 특별경계(2.13.~3.15.), 태풍내습기(6.15.~10.31.), 대조기(10.3~10.10.) 등 특별 기간을 선정하여 연안·선박사고 집중관리
- (관제 서비스) 제주남부·상왕등도·추자도 서측과 명량수도 해역 등 관제 공백 해소\*로 선박교통 안전관리 강화('25.6.)
  - \* (관제면적) 40,013km<sup>2</sup> → 43,908km<sup>2</sup>로 3,895km<sup>2</sup>(9.7%) 확대
- (구조 역량) 전문 구조요원이 배치된 구조거점 파출소를 확대(29 → 33개소) 하고, 신형 연안구조정을 추가 도입(86 → 89척) 하는 등 구조세력 보강
  - 인명구조자격보유율을 높이고 긴급·전문구조과정 운영 등
- (민·관 협업) '25.1월 출범한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을 위해 해양경찰서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, 조직과 인력('24. 1.1만명 → '25. 1.3만명)을 정비
- (정보 기반 운항) 국내·외 선종별 항적 및 전국 해경서 민원 분석으로 안전 취약해역을 선정하고, 항공기 운영을 통한 집중 관리
- (방제 장비·시스템) 고위험 복합해양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방제정 확충\* 및 해양환경 위기대응 통합지원시스템(~'26) 구축 추진
  - \* LNG방제함 1척 현장 배치(여수) 및 1500·300톤급 차세대 방제함 기본설계 완료

- (보완점) ① 영흥도 순직사고 발생에 따른 2인 1조 준수 등 재발 방지 대책 추진  
 ② 육아휴직, 저연차 공무원 면직 증가 등으로 현장 인력 부족문제 개선 필요  
 ③ 여객선 좌초 사고 및 선박교통관제 범위 확대 등에 따른 VTS 시스템 보완

## □ 해양에 특화된 수사역량 강화 및 해양치안 질서 확립



- (마약류 범죄 대응) 중남미 마약 생산국, FBI 등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, 「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」(7.2.~7.4.) 등 개최

\* 해양 코카인 적발 : '21) 부산 35Kg<sup>100만명</sup> → '24) 부산 100Kg<sup>330만명</sup> → '25) 강릉 1,700Kg<sup>5,600만명</sup>

- 선박 수중 은닉 마약류 탐지를 위해 수중드론 도입(5대, 지방청별 1대), 우범 선박 대상 수중 정밀검사 시행

- (특별 단속) 선박 절도, 선원 폭행·강요 등 민생·인권침해 특별단속\*을 실시하고, 국고보조금 편취 등 비리척결을 위한 기획 수사 실시

- (법·장비) 수사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령 개정\*과 수사관들의 안전을 위한 방검장갑 등 현장 임무 장비 보급(7종 1,416점)

\* 『해양경찰수사규칙』 등 법령 3건, 행정규칙 4건, 수사업무 지침 13건 개정

- (국제범죄 대응) 해상 국경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 교육·훈련\* 및 국제공조 강화\*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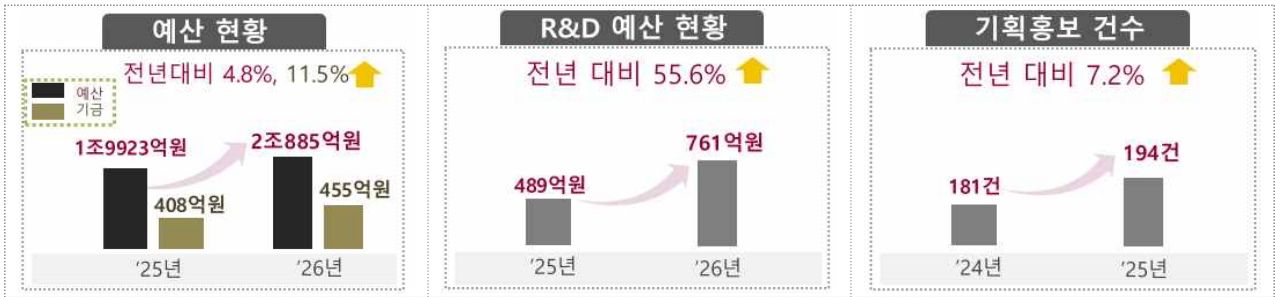
\* 전문기관 위탁교육 과정 운영 및 안보위해 의심선박 대응 훈련 등

\*\* 중국 해경국과 공조수사, 인터폴 공조 강화를 통한 마약범죄 피의자 검거·송환 등

(보완점) ① 마약·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의 확산 우려에 따른 대책 추진 필요

② 수사구조개혁 등 사법환경 변화로 인한 전문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

## □ 탄탄한 인프라 구축으로 정책 실행력 확보



- (정책 추동력) 국정과제 등 우리청 역점 정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마중물로서 예산\*과 인력·조직 등을 전략적으로 확보

\* '26년 해양경찰청 예산 : 2조 885억원

- (미래비전) 「미래전략 2040」 연구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성과 장기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

- 급변하는 AI 첨단기술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하기 위해 '해양경찰 AX 기본전략'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·포럼 등을 통한 AX 방향성 제시

- (인사·교육) 업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·시스템 개선 및 미래 융합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 추진

- (정책홍보) 국가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기획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해양경찰 이미지 제고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

※ 마약검거·인명구조 등 주요 활약상 방송 홍보 및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등

- (해양 네트워크) 주요국 해양치안기관간 전략적 교류·MOU 체결 및 해상교통로 항행 안전 확보 등 국제공조 강화

※ (양자) 인도·베트남 양자회의 등 (다자)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 회의 등

(보완점) ① 정부출범 2년차에 따라 국정과제의 추동력 확보 위한 미래전략 구체화  
 ② 첨단기술 가속화에 따른 업무 전반의 혁신적 전환이 요구



---

## Ⅱ. 정책 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

---

## 1. 여건 분석

- (국제적 여건) 해양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에 따른 전략적 대응 필요
  - (해양 안보) 한·중 간 '서해 문제' 개선을 위한 외교정책\*이 진행 중이나, 복합적 국제정세 속에 지속적인 해양 감시와 대응이 요구
  - (국제 협력)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재난발생과 해양 생태계 복원력 저하, 어업자원 감소 등에 대비해 초국가적 해양 협력\* 필요
    - \* 불법·비보고·비규제 어업 규제 강화, 국제해양 수색구조 협력 및 해양환경 보호 등
- (사회·기술적) 안전에 대한 국민니즈 증대와 기술패권경쟁 시대 도래
  - (국민 안전) 세월호·이태원·무안 여객기 참사 등 대형재난의 경험으로 국민들은 즉각적이고 완벽한 국가적 재난대응시스템을 요구
    - \* 복합적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칸막이 해소 등 통합적 협업 문화 필요성 증대
  - (기술 경쟁) 전 지구적 글로벌 기술 중심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중심축으로 부상
- (정부 기조) 책임행정, 소통, 성과도출 등을 통한 정부 대전환 추진
  - (정부 신년사) '26년을 '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'으로 설정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「5대 대전환 분야\*」로 선정
    - \* 지방주도 성장, 모두의 성장, 안전이 기본인 성장, 문화가 이끄는 성장,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
  - (정부 신년사) 전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과 토론 방식의 진행을 통해 소통을 강조
  - (국무회의 등) 주요 현안 및 지적사항에 대한 유기적 관리와 점검으로 실질적 업무 개선과 함께 성과와의 연계성을 주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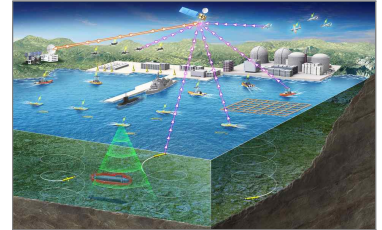


## 2. 업무 추진방향

### □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

#### ○ 「해양안전·감시장비 확충 등 스마트 관리역량 강화」

- 첨단 감시자산 정보와 국내·외 선박신호, 각종 해양데이터를 수집·분석하는 **해양영역인식(MDA<sup>1)</sup>) 체계 구축과 해양경찰력 증강\***을 통한 경비력 강화



<MDA 체계>

- \* 서해·제주권 광역 경비구역 신설, 대형함정 전담 배치
- AI 기반 해양안전·재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, 연안순찰 드론의 단계적 배치와 동해·포항 광역 VTS<sup>2)</sup> 구축으로 관제 범위를 확대
-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기능을 강화하고, 복합 해양오염사고 대비 다목적 화학방제함·친환경 방제정 건조
- 정부 업무보고 계기 대통령 지시사항과 국무회의 등을 통해 하달되는 지시·당부사항 및 경청·자체과제 등의 차질없는 이행

### □ 현장 집행력 강화를 위한 법 집행·작전운영·거버넌스 보강

#### ○ (법 집행) 불법조업, 국경범죄, 해양과학조사 등에 대해 국제법적 정당한 단속과 권리행사를 하고, 수사권 조정 대비 전문성을 강화

- 해양안전 확보와 청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법률적 기반을 재정비하여,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, 책임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

#### ○ (작전 운영) 경비·구조안전·수사·해양오염방제 등 해양경찰 임무 수행능력을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보강

- 특히, 첨단 기술 기반 장비·시스템 등의 확보로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

#### ○ (거버넌스) 유관기관·군·국제기구 등과 통합 해양치안 협력체계\*를 구축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, 긴밀한 현장 대응력을 유지

\* 범정부 기술·정보 협력체계인 K-MDA 센터 운영을 위한 해양경비법 개정 추진 등

-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확대\*

\*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시간 확대 및 4대보험 지원 등으로 공공일자리 개선

\*\* 해양재난구조대·해양자율방제대 등 전문 교육·훈련, 복장·장비 등 지원

1) MDA(Maritime Domain Awareness, 해양영역인식) :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보·안전·경제·환경 등의 다양한 위협 요소를 미리 탐지·식별하고, 선제 대응하는 '광역 감시·정보 체계'

2) VTS : Vessel Traffic Service System <총 19개(광역 3개, 연안 4개, 항만 12개) 운영 중>

□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정책추진 몰입도 향상

- (자존감과 신뢰 제고) 직장협의회 활성화(운영지원과) 및 경청과 소통 모임의 정례 운영과 상호존중 문화 확산

\* 실무자 중심의 주니어보드 운영, 「직무미러링」 경험 제공, 「캠페인」 등

- (자신감 강화) 직무 트렌드 교육 강화를 통한 직원들의 성장 욕구 해소와 연구모임 활성화, 칭찬사례 발굴 및 특별성과 포상 추진

\* 「명사특강」, 「멘토십」, 「복세통」 등을 통한 성장 경험 프로그램의 꾸준한 제공

- (일하는 방식 개선) 비생산적인 제거, 회의·보고 문화 점검, 업무 고수 선발대회 등을 통해 업무 효율화

\* 「AI 활용 경진대회」 통한 RPA 확산, 현장과의 소통 등

□ '26년 정책·성과관리 일원화 전략 추진

- (시행계획)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여 관리과제 및 성과 지표\* 설정 등 '2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'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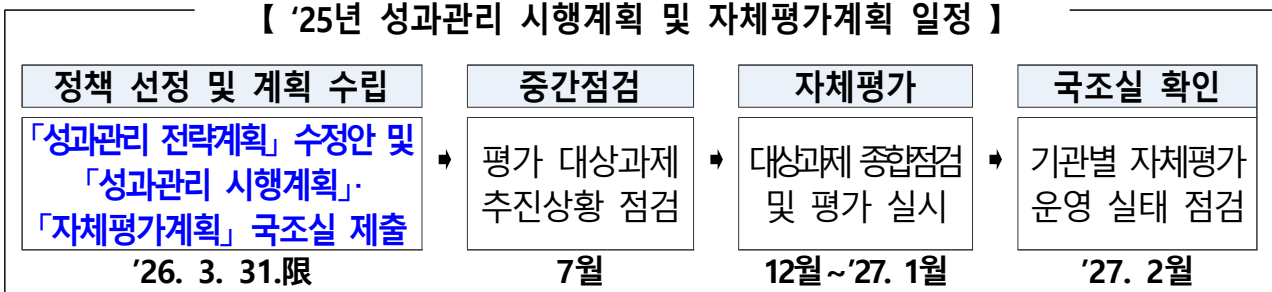
\* 「나포 중심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」 등 정부정책 기조를 반영한 지표 설정

<참고 '26년 정책추진 3대 전략>

I. 해양안보	해양권의 확보를 위한 안정적 해양법 질서 확립
II. 현양안전	국민생명·안전 확보를 위한 신뢰받는 해양안전망 구축
III. 지속가능성	지속가능한 바다, 미래를 준비하는 해양경찰

- (자체평가계획)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△자체평가 방법 △ 위원회 구성·운영 △ 평가·환류 등의 '26년도 자체평가계획 수립

【 '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일정 】



---

## Ⅲ. '26년 주요업무 계획

---

# 정책 추진 체계 및 주요 정책

**미션**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



**비전** 미래를 준비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

## 3대 핵심전략(3S)



법집행  
(Law enforcement)

작전 · 운영  
(Operation)

거버넌스  
(Governance)

## 핵심전략(3S) 기반 정책추진 체계

해양안보  
(Security)



### 해양권익 보호를 위한 안정적 해양법 질서 확립

- 엄정한 법 집행으로 책임있는 해양주권 수호
- 해양영역인식(MDA) 기반 통합적 작전 역량 강화
- 범정부·국제협력 해양안보 거버넌스 확보

해양안전  
(Safety)



### 국민생명·안전 확보를 위한 신뢰받는 해양안전망 구축

- 촘촘한 안전관리로 연안사고 예방
- 구조역량 보강 및 민·관 협력체계 확대
- 국민 안전·민생 중심 해양치안 수사역량 강화

지속가능성  
(Sustainability)



### 지속가능한 바다, 미래를 준비하는 해양경찰

- 해양 환경재난 관리 강화로 청정한 우리바다 보전
- 지속가능한 임무 수행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
- 현장 중심 조직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

## 가. 해양권의 보호를 위한 안정적 해양법 질서 확립

### 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책임있는 해양주권 수호

- 고질화·지능화 된 불법조업 외국어선 근절
  - (강력 단속) 시기별 中 어선 밀집해역에 단속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, 기동전단을 편성하여 대규모 특별단속 등 ‘나포’ 중심 강력 대응
    - ※ 조업선 밀집해역 경비함정 증강배치, 수시 특별단속, 해수부·해군 합동단속 등
  - (엄정 처벌) 무허가 조업 등 벌금상향, 비밀어창 처벌유형 신설, AIS 조작 등에 대한 담보금 기준마련과 중대위반 어선은 中측에 직접 인계
  - (전술 강화) 항공기·드론을 활용한 海·空 입체적 단속 전술 개발 및 등선 방해물 등에도 중국어선에 직접 계류가 가능한 단속 전담함정 도입\*
    - \* 단속 전담함정 : ‘26) 설계 및 건조(2척) → ‘27) 건조(2척) → ~ ‘30) 총 4척 배치
- 우리 해양조사활동 보호와 주변국 활동 대응
  - (우리 측 해양조사 보호) 우리 조사선에 대한 주변국 방해에는 동조기동으로 방해활동을 차단하는 등 계획된 조사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
  - (주변국 해양조사 대응) 우리 정부의 동의 없는 외국 조사선의 활동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을 전담 배치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
-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한 대책 추진
  - (마약류 범죄) 국내외 공조 체계 강화와 함께 수중드론 이용 불시 선저검사\* 등 첨단장비 활용으로 지능화 된 밀반입 수법에 대응
    - \* 수중드론 5대 도입(지방청별 1대), 우범 선박 대상 수중 은닉 마약류 탐지 실시
  - (밀항·밀입국) ‘해상 국경범죄 대응 종합대책’을 마련(‘26.1.)하고, 주요 밀입국 루트 및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점검 등 실시

## ② 해양영역인식(MDA) 기반 통합적 작전 역량 강화

### □ MDA 플랫폼 중심 광역 감시·정보체계 구축

- **(시스템)** 선박 항적, 출·입항지, 제재 및 검사 이력 등 데이터 누적 관리와 해양데이터를 융합·분석하는 ‘해양경비지원시스템(MDA플랫폼)’ 개발(~’26)
  - 빅데이터·첨단기술을 반영한 ‘AI 기반 확장형 플랫폼’ 구축 추진(’26~)
- **(위성 인프라)** 다부처(과기부·우주청·방사청 등) 공동개발 3종 위성(관측위성 전천후 광역감시, 통신위성 함정·항공기 위성통신망 개선, 수색구조위성 선박조난신호전송) 순차적 발사\*
  - \* 관측위성(’26, 검증2기 / ’29~’31, 44기), 통신위성(’28, 1기), 수색구조위성(’33, 1기)
  - 위성 운용·관제·활용 등을 위한 ‘해양경찰 위성센터’ 준공(~’27 上)
- **(무인기)** 1,500톤급 대형함정 탑재용 무인기(운영반경 20km) 확대 도입\*
  - \* (~’25) 28대 <무인헬리콥터 13, 무인멀티콥터(수소연료) 15> → (’26~’27) 4대

### □ 전략적 우위 선점을 위한 경비세력 증강 배치

- **(서해 전력)** 잠정조치수역 등 경계미확정해역 관리 강화를 위해 광역 경비구역을 신설하고, 전담 대형함정을 순차적 배치
- **(동해 전력)** 울릉 사동항에 중·대형함정을 전진 배치하고,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독도 등 외국 관공선 감시와 우발사태 대응
  - \* 승조원 지원시설 완공(’26.5.), 전진기지로 활용 및 경비함정 운용계획 수립

## □ 해양안보 위기 대응역량 및 대비 태세 강화

- **(안보위협 대비)** 北, GPS 교란 행위 등 각종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접경 해역 함정에 **지상파항법시스템\***을 설치하여 우리 조업선 안전관리

\* 지상파항법시스템 : '25) 접경해역 함정 2척 시범운영 → '26) 21척 확대 설치

- **(해양 대테러 강화)** 드론·무인정을 이용한 **新 유형 테러** 대비 첨단기술 적용한 **전술장비**를 체계적으로 보강하고 대응전술을 고도화

---

## ③ 범정부·국제협력 해양안보 체계 강화

---

### □ 다기관 참여 『한국형 국가 MDA』 센터 구축

- **(센터 구축)** 부처별로 분산된 해양 감시자산 및 데이터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**‘K-MDA 센터’** 구축 추진(~'28)

\* K-MDA 센터 운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「해양경비법」 개정('26~)

- **(관계기관 협력)** 해군·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국가 MDA 계획 수립 및 **범정부 MDA 협의체\*** 운영 방안 마련('26 下)

\* 참여기관 간 역할·책임을 분담하고 해양 경비정보 공유 체계 등 구축

### □ 글로벌 해양 네트워크 확대

- **(신규 네트워크 구축)** 북극항로 개척 대비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북극해양치안기관회의(ACGF) 등 국제 회의 **옵저버 참석\*** 추진

\* 북극권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, 다자회의 시 관련 국가와 양자회의 실시 등

- **(한-아세안 협력 확대)** 정부 성과사업 이행을 위해 **한-아세안 협력 기금\***을 활용한 **‘한-아세안 해양치안 아카데미’** 운영

\* 대한민국이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출범시킨 협력 기금(외교부 관리)

## 나. 국민생명·안전 확보를 위한 신뢰받는 해양안전망 구축

### ① 촘촘한 안전관리로 연안사고 예방

#### □ 연안 위험요소 분석을 통한 관리 강화

- **(연안안전)** 시기-대조기·명절연휴, 장소-갯벌·테트라포드, 행위-해루질·스노클링 등 위험 요인 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\* 실시

\* 경비·구조세력 전진배치, 안전순찰·점검 및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단속 등

- **(레저안전)**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사고 다발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,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\* 추진

\* 수중레저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, 합동 워크숍 및 교육과정 확대, 관계 법령 개정 등

#### □ 인프라·기술 보강으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

- **(교통관제)** 동해·포항 광역VTS 운영('26~)과 새만금·부산기장·거제·청산도\* 해역에 레이더 등 관제시설을 확충

\* 새만금·기장 '26) 구축 거제 '26~'27) 구축 청산도 '27~'28) 구축

- 관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, AI로 사고위험을 식별하는 등 인적 관제 역량 보강을 위한 디지털 VTS 기술 개발('25~'29)

- **(연안순찰 드론)** 갯벌, 갯바위 등 접근이 어려운 연안 위험구역 안전 관리를 위한 열화상카메라·스피커 탑재 드론\* 도입

\* '26) 5개소 → '27) 20개소 → '28) 20개소 → '29) 20개소 → '30) 12개소

#### □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임무수행

- **(근무체계 확립)** 파출소 기본근무 수칙 준수\*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, 경찰관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성능이 개선된 신규 외근조끼 보급

\* 2인 1조 순찰,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총원 상황 대응 등

- **(진단·개선)** 변화된 연안 환경과 치안 수요를 고려하여 파출소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발굴·시행

## ② 구조역량 보강 및 민·관 협력체계 확대

### □ 수색구조·안전 장비 및 조직·인력 확충

- **(장비분야)** 갯벌·저수심에 신속 대응을 위한 동력구조보드를 확대 배치하고, 신형 연안구조정과 구조 승합차량 도입을 추진
- **(조직신설)** 제주권의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제주특수구조대 신설('26.3.)과 조기 정착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전담 T/F팀(중특단) 운영
- **(전문인력)** 신규채용 및 구조대원 자체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, 치안수요 변화와 구조 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배치

### □ 해양 재난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

- **(제도 보완)** 긴급구조지원기관(86개) 중 함정·항공기 등 장비·인력 지원이 가능한 59개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·보완
- **(역량 제고)** 지원기관 별 지정된 긴급대응협력관 교육·훈련과 정례회의(연 2회) 등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 및 합동성을 강화

### □ 민·관 협력을 통한 구조역량 보강

- **(연안안전지킴이)** 연안위험구역 97개소에 연안안전지킴이 194명을 배치하고, 활동 시간을 확대('25, 월 51h → '26, 월 80h) 운영
- **(해양재난구조대)** '25.1월에 출범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운영 상 개선점 및 현장 대원 제안사항 등에 대해 보완\*

\* ① 단체복장 지급, ② 구조 장비·물품 지원, ③ 전문 교육·훈련, ④ 상해보험 가입 등

### □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문화 확산

- **(연안안전교육)** 유관기관 안전교육 프로그램\*과 연계하여 안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및 생존수영 등 교육 확대

\* 초등생 늘봄학교, 소외지역 학생 찾아가는 안전교육, 어린이안전재단 교육프로그램 등

- **(디지털 기반)** 국민참여 SNS 숏폼 챌린지, 유명 인플루언서(해루질, 낚시 등) 및 민간기업 미디어와 연계한 해양안전 콘텐츠 제작 추진

### ③ 국민 안전·민생 중심 해양치안 수사역량 강화

-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산업재해·민생범죄 등 대응
  - (해양산업재해) 전국에 수사전담반을 확충하고, 노동부,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및 전문교육을 강화
  - (특별단속) 국고보조금 비리 등에 대한 기획수사와 안전저해 및 민생·인권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시기별·해역별 특별단속 추진
- 사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수사 제도 정비
  - (제도 정비)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관련 법·제도 개선과 수사제도혁신 TF('25.6.) 추진 과제(4개분야 17개)를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
  - (통제 강화) ① 구속사건 관리시스템 구축, ② 보완수사 점검·관리 강화, ③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내·외부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
-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·기반 구축
  - (AI시스템) ① 수사보조부터 ② 분석·정책제안, ③ 범죄예측까지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'AI 수사지원시스템' 도입 추진
  - (교육체계) 해양특화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수사교육기관 설립\* 추진  
\* 現 수사연수소 → 수사연수센터 설립
- 해양 과학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교류·협력 강화
  - (협업체) 대형 해양 재난사고 시 희생자 신원확인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해경·경찰·국과수·해군과 협업체 구축
  - (사이버 범죄 대응)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\*를 강화하고,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등과 학술 교류 추진  
\* **훈련** 사이버범죄 대응 합동수사훈련(국조본) / 선박 사이버침해 대응 합동훈련(해수부 등)

## 다. 지속가능한 바다, 미래를 준비하는 해양경찰

### ① 해양 환경재난 관리 강화로 청정한 우리바다 보전

#### □ 기름 유출, 화재·폭발 등 복합 재난 대비·대응 강화

- **(인프라)** 복합 오염사고와 LNG 등 친환경 연료선박 확대에 따라 다목적 화학방제함\*을 건조하고, AI기반 통합 방제지원시스템\*\*을 구축

\* 1,500톤급 화학방제함(소화·예인 특화, ~'28), \*\* 빅데이터 활용 방제전략 지원(~'26)

- **(방제 자원)** 권역별 방제지원센터(대산·광양·울산)에 대형 장비·자재를 집중 비축하고, 초기대응 장비(경량 유회수기, 화학사고 대응장비\*)를 전진 배치

\* 화학물질 탐지장비, 개인 보호장비(화학보호복·공기호흡기), 소화약제(내알콜폼) 등

- **(공동대응·협업)** 관계기관 공동대응\* 및 주요 항만 공동대응협의체\*\* 운영

\* 기후에너지환경부·소방청 등과 사고정보 공유·공동대응, \*\* 민간 예인선에 소화약제 탑재 지원

#### □ 국민 체감형 해양오염 예방활동 전개

- **(제도 개선)** 해양오염 취약선박(장기방치·계류)과 폐어구 등 고질적 오염원 관리를 위해 법령\*을 개정(해수부 협조)하고, 제도 홍보 등 후속 조치 시행

\* 「해양환경관리법」(위험성 평가 및 오염물질 제거), 「수산업법」(어선 어구관리기록 점검 등)

- **(점검 강화)** 선박·해양시설의 해양오염 예방과 항만 대기질 관리 및 K-씨푸드(패류·김 등)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오염원 중점 관리\*

\*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(5~6월), 미세먼지 계절관리(12~3월), 패류·김생산해역 예방점검(생산시기)

- **(보전 활동)** 민·관협력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보전 활동 강화\*

\* 바다의날(5월), 연안정화의날(9월),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기 재해쓰레기 수거 지원

#### □ 국내·외 방제 협력체계 확대

- **(민·관 협업)**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등 전문가,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, 해양자율방제대\* 교육·훈련 등으로 운영 내실화

\* 원거리·소규모 항포구 초기 사고대응을 위해 어촌계 중심으로 구성(313개소, 3,498명)

- **(국제 협력)** 한-아세안 전문교육·포럼 확대, 다자 간 방제회의 참여 등

---

## ② 지속가능한 임무 수행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

---

- 현장 임무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 추진
  - **(내재화)** 「AI미래기술정보융합단」\* 구성으로 일 하는 방식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, 자체·외부 위탁교육으로 내부 전문가 확보
    - \* 인공지능전환팀 + 미래경비기획과(MDA, 위성, 첨단무인) + 연구개발계(R&D)
      - ┆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
  - **(AI 10대 프로젝트)** 항공 채증영상에 AI를 적용하여 ①불법조업 판단 ②요구조자 발견 ③오염물질을 실시간 분석 할 수 있는 기술 개발
- 기술과 현장이 이어지는 연구개발(R&D) 수행
  - **(의사결정 지원)** 해양재난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신속·정확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‘지능형 해양재난대응’ 기술 개발('25~'27)
  - **(무인 장비)** 고위험 재난현장에서 경찰관 안전 확보와 효율적 임무 수행을 위한 드론, 수중로봇 등 무인·자동화 기술 연구

---

## ③ 현장 중심 조직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

---

- 직무역량 기반 인재양성과 현장 중심 인사제도 운영
  - **(직무 역량)** 재직자 전담 교육훈련 시설(인재개발원) 설립을 추진하고, ‘표준훈련절차’ 연구 및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\* 구축
    - \* 재난안전대응 교육훈련 플랫폼 R&D('23~'27), 확장현실 적용 단속·훈련센터('25~'27) 등
  - **(현장 인력 충원)**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·수사 등 인력을 집중 보강\*하고, 신규채용을 확대(최대 120%)하여 대민접점 현장에 우선 배치
    - \* '25) 144명 정원 확보 → '26) 함정·파출소·구조대·VTS·상황실·마약 및 국경범죄 대응 증원 추진
- 현장 근무자 복지 확대 및 처우 개선
  - **(심신 회복)** 해양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과 수중수색 등 업무특성으로 야기되는 부상·질병\*에 특화된 의료시설 설립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추진
    - \* 잠수병(잠수구조 작전),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·우울증(함정 근무 및 불법 외국어선 대응 등)
  - **(처 우)** 현장 근무자 위험근무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(월 7→10만원) 하는 등 하위직급 중심의 현장 직원 처우개선